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1994. 12

吳承烈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여

후

북한과 러시아(구소련) 및 동구의 경제관계가 쇠퇴한 1990 년대에 北·中經濟關係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더욱이 근래 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논의 과 정에서 북·중경제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 상호투자, 다자간 경제개발 계획 내에서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중경제관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北韓의 대외경제정책 基調

북한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 획경제 對外貿易體制의 기본적 특징인 자급적 무역체제, 국 가독점적 무역체제, 화폐의 불태환성, 협정에 의한 물물교환 식 교역형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차별적 교역조건 등을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은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각급 단위는 물론 郡이나 지방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산하 무역상사 를 설치하게 하고, 무역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적 극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원 가능한 수출자원을 개발하여 외화획득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 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무역상사의 증설이

나, 부분적 무역권한의 분권화가 곧바로 국제시장을 활용한 북한 대외무역체제의 효율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외경제관계를 위한 은행 역시 금융기관 본연의 국제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기보다는 무역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담당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北·中 貿易의 추이

최근 北·中貿易關係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변경무역의 급증이다. 대외무역환경 변화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점차 국제시장가격 적용 및 경화결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교역형태의 변경무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곡물과 원유 등 주요 국가관리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과거의 北·中經濟關係로 미루어 보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성 수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원유 등 국가관리품목을 제외하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대체로 수지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교역상의 수지평형은 일반적인 다자간 무역관계 속의 수지평형이 아니고, 상호협상에 의한 바터제 교역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

다.

북·중무역관계에 있어서 仲介貿易은 대부분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의 대북한 총수출액중 90%이상은 홍콩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북한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차지한다. 이는 홍콩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계 혹은 중개무역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교역상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콩이 북한에 대해 재수출하는 상품중 8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콩-북한 무역은 사실상 또 하나의 북·중무역형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北·中 相互投資

무역 이외의 북·중경제관계의 통로로는 1984년 북한이 「合營法」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북·중 상호간의 투자 활동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래 1990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으며, 북한 역시 北京, 延吉, 丹東市 등에 수십여 건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 이외의 북·중경제관계는 아직 그 규모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이며, 실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

투자활동이 무역에 비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경제체제와 중국경제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측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윤동기의 합작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나진·선봉을 포함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둘러싼 북·중·러 3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도 무역 이외의 경제협력 경로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多者間 經濟開發計劃內에서의 北·中關係

무역과 상호투자 외에 1990년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또 다른 차원의 북·중경제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에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연계 등 서로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과 투자유치계획과 같이 경쟁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UNDP 주관하의 다자간 경제개발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당분간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雙務的 經濟協力 方式에 의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5. 北·中 經濟關係의 한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중교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는 심각한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수출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바터제 교역이 가지고 있는 결제방법 및 가격결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북·중간의 교역증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강철, 시멘트, 목재 등은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경우 북한자체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운 품목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품인 원유, 곡물 및 식품류, 일부 기계부품 등은 중국과 북한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 상품구조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국내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임시적 商品構成일 뿐이다.

넷째,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한 무역발전요인은 갖추고 있으나, 두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통신 및 국제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缺如하고 있다.

6. 北·中 經濟關係 전망

1991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대외경제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1960년대 이래 가장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의 주공급원이 되었으며, 북한은 북·중변경무역을 통해 주민의 생활필수품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경제체제의 개방에 따른 새로운 관계의 발전이 아니었으며, 중국 동북3성과 북한간의 바터형식 교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단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까지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패턴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이후 北·中貿易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이를 경제논리에 의한 국제무역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1992, 1993년도의 북·중무역 확대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물물교환 방식을 통한 변경무역의 증대와 중국정부의 지원성 수출이 지속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개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더 이상 우호가격이나 청산계정을 통한 支援性 對北韓 輸出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곧 국제시장가격의 적용을 통한 대

북한 대금상환 압력의 증가로 나타났다. 비록 중국정부가 북한체제의 생존이나 특별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원유나 곡물의 대북한 경제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북·중경제관계의 지속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經濟가 시장지향적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는 단기간에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역시 상호 경쟁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 연계를 위한 사안별 협조 이외에 적극적인 계획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국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北·中經濟關係는 1994년도와 같이 큰 폭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북·중경제관계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와 같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북·중경제관계에 의존하여 현재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점차적으로 시장지향적 개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제노동분업체계의 편입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불균형과 경쟁력 낙후로 인한 수출능력의 제약요인 등은 북한경제를 끊임없는 무역적자와 외채부담의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北韓의 對外經濟政策 및 對外經濟體制	5
1. 北韓經濟 推移와 對外經濟政策 基調	5
2. 北韓의 對外經濟體制	15
3. 小 結	28
第 III 章 北·中 貿易推移와 形態	30
1. 北·中 貿易推移	30
2. 北·中 交易의 商品構成	38
3. 北·中 貿易形態	49
第 IV 章 相互投資 및 多者間 經濟開發計劃	60
1. 相互投資	60
2. 多者間 經濟開發計劃內에서의 北·中關係	61
第 V 章 北·中 經濟關係 展望	70
1. 北韓의 對中國經濟政策	70

2. 中國의 對北韓經濟政策	74
3 北·中 經濟關係 展望	76
第 VI 章 結 論	79
參考文獻	82
附 錄	85

表 目 次

〈표-1〉 北韓 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推移	5
〈표-2〉 북한경제의 주요지표 추이 : 1990~1993	9
〈표-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제정 현황	13
〈표-4〉 中國과 北韓의 貿易推移.....	31
〈표-5〉 北韓貿易中 中國과 蘇聯의 比重變化	35
〈표-6〉 北韓의 主要貿易相對國 比重	37
〈표-7〉 북한의 주요 품목별 대중국 교역 추이	41
〈표-8〉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 1992~1994	44
〈표-9〉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 : 1992~1994	46
〈표-10〉 年度別 北韓의 對中國 原油導入量 및 價格變化 推移	50
〈표-11〉 중국의 원유, 옥수수 대외수출 단가 비교	50
〈표-12〉 1991년도 주요 북·중변경무역 지역 개황	51
〈표-13〉 北韓의 對吉林省 邊境貿易(1986~1992)	52
〈표-14〉 1993년도 중국동북지방의 대북한 변경무역액 ...	54
〈표-15〉 홍콩의 대북한 교역 실적	57
〈표-16〉 北韓의 交易對象國別 貿易收支 推移	71

圖 目 次

〈그림-1〉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기구도	21
------------------------------	----

第 I 章 序 論

北韓의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中國은 중요한 지위를 점해 왔으며, 소련 및 동구와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쇠퇴한 1990년대에 북·중경제관계는 빠른 成長勢를 보였다. 더욱이 근래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논의 과정에서 북·중경제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다.

북·중경제관계는 두만강개발계획 등 다자간 경제협력계획 및 상호간의 직접투자, 정부간의 협정무역과 변경무역, 홍콩을 통한 중개무역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1992, 93년도에 비해 1994년도 상반기에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감소함으로써 북한과 중국 비교우위에 따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역관계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큰 무역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만강유역 개발을 둘러싼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별적 이익이 상충되어 UNDP(유엔개발계획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주관하의 다자간 계획의 추진은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개별국가간 협의에 의한 경제협력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중국은 동해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및 러시아와의 쌍무적 협정에 의해 중국 동북3성과 해당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중 상호직접투자 규모는 아직 작은편이나, 최근 북한의 물자난과 유통질서 변화에 편승한 소규모 투자 및 변경무역과 연계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중경제관계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에 비해 제한적이며 국지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방향 및 한계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對北經協政策 및 對中經濟政策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북·중경제관계와 관련된 주요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변경무역규모의 확대 등 최근 북·중무역 추이는 과연 국제무역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중국의 경제개혁 심화는 북·중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관계 변화와 중국 대외경제체제의 변화를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요인이 북·중경제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북·중경제관계의 특성과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1980년대

이래 중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제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국제무역 발생의 경제적 요인은 한 국가의 자원보유량에 따른 비교우위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 상품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장상황이 이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을 때, 국제무역의 잠재력은 실현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 역시 결과적으로는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으나, 교역잠재력의 실현에 의한 경제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 교역 확대에 의한 주민복지 증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北·中經濟關係의 요인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과 구소련 지역의 경제관계 쇠퇴 이후 북·중경제관계의 증진이 과연 어떠한 교역결정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면 북·중경제관계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1979년 이래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경제특구 및 연안개방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경제체제개혁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 비교적 낙후되어 온 중국의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역시 개혁·개방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市場機構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

는 형편이다. 북·중경제관계의 대부분이 결국 북한과 중국 동북3성간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중국 동북부지역의 시장화 및 대외개방 추이가 향후 北·中關係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곧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방향 전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북·중경제관계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방향 및 상대국에 대한 경제정책 등에 의해 변화할 것이며,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중경제관계는 곧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 변화방향을 살펴보고, 북·중경제관계의 경로 및 변화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향후 북·중경제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第 II 章 北韓의 對外經濟政策 및 對外經濟體制

1. 北韓經濟 推移와 對外經濟政策 基調

북한경제는 1960년대 초반까지 자원동원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결함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1〉 北韓 國民所得의 年平均 成長率 推移

(單位 : %)

'54-56	'57-61	'61-70	'71-75	'76-80	'81-84	'86-89	'90	'91	'92	'93
30.1	20.9	7.5	10.4	4.1	4.3	2.4	-3.7	-5.2	-7.6	-4.3

자료 : 1954~89년 자료 ; I. Jeffrie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A Guide* (London :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1993), p. 197에서 재인용. 1990~93년도는 한국은행 평가치임.

〈표-1〉은 1954~1992년 동안의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외형에 있어서 제1차5개년계획(1957~61) 완료시점까지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시된 제1차7개년계획(1961~67), 6개년계획(1971~76), 제2차7개년계획(1978~84), 제3차7개년계획(1987~93) 등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제는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자력갱생’을 주요한 경제정책 지침으로 강조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 초기부터 소련과 중국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원조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자급적 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불균형적 성장정책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나, 이념지향적 정치경제체제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체제의 개혁은 시도하지 못했다. 한편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無償援助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공업 및 군수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산업불균형은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지원 및 국내자원의 동원을 통한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¹⁾ 서방국가로부터 주요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및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북한정권 수립 이래 1970년까지 북한은 구소련, 중국, 동구제국으로부터 도합 9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와 7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유상원조를 제공받았으며, 이중 대부분이 산업설비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Horst Brezinski,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KDPR and CMEA and Its Members,” in *The Economy of the Kore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1945-1977: Economic Policy and Foreign Trade Relations with Europe*, ed. Youn-soo Kim (Kiel : German Korea-Studies Group, 1979), pp. 155~165.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과 서방국가간의 무역비중은 신속히 증가하였다. 북한 총무역액중 서방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경우 22.2%에 불과했으나, 1973년도에는 33.2%로, 그리고 1976년도에는 42.5%로 증가하였다.²⁾ 그러나 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석유과동으로 인해 시설재를 포함한 공산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급등한 반면, 북한의 주된 수출품목인 철광석 및 비철금속류의 가격은 폭락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1970년대 후반 무역결제수단의 결여와 외채상환 능력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은 더 이상 수입설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북한은 비교적 양호한 농업생산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북한은 서방공업국으로부터 생산설비 도입이 어렵게되자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誘致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체제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법률제정은 그 효과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이래 1993년 12월까지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약 140건에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이며, 이중에서 90% 이상이 제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합작투자로 구성되어 있

2) Bon-Hak Koo,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1961-1990*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p. 152.

다. 더구나 이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것은 약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북한은 대외경제분야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1985년 이후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실시를 강조함으로써 물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개별기업의 경제효율 제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근래에는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은 개별기업소를 업종별로 묶은 연합기업소를 계획단위로 함으로써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생산단위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본질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 조치가 북한경제의 構造的 問題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으며, 80년대 후반에도 북한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극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1990년도에 북한의 대외무역총량의 50%이상을 차지하던 소련과의 무역량이 1991년도에는 14.1%로 감소하였으며, 북한경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도 급속히 줄어들었고 무역결제 역시 硬貨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991년 이래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쇠퇴로 인한 원유 등 주요 공업원자재 도입량 감소, 동구사회주의 국가들

3) 통일원,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서울: 통일원, 1994), p. 8.

의 체제전환에 기인한 수출시장의 상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심화 및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고조 등의 요인에 의해 정권수립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표-2〉 참조).

〈표-2〉 북한경제의 주요지표 추이: 1990~1993

지 표	단 위	1990	1991	1992	1993
G N P	억US\$	231	229	211	205
수 입	"	18.2	16.4	15.7	15.4
수 출	"	12.7	9.4	9.3	9.4
무 역 총 액	"	30.9	25.8	25.0	24.8
외 채	"	78.6	92.8	97.2	103.2
정 부 예 산	"	172	171.7	184.5	187.2
전 력 공 급	억kwh	277.4	263	247	221
원 유 수 입	만ton	252	189	152	136
곡 물 생 산	"	481.1	442.7	426.8	388.4
강 철 생 산	"	336	316.8	179.3	186
시 멘 트 생 산	"	613	516.9	474.7	398
비 료 생 산	"	158.6	143.5	138.5	160.9
석 탄 생 산	"	3,315	3,100	2,920	2,710
직 물 류 생 산	억M	2.0	2.1	1.7	1.9

자료 : 1990년도는 통일원, 1991~1993년도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임. 수출입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각년도).

한국은행과 통일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3년도 북한의 경상 GNP는 205억 달러로서 3,287억 달러 규모의 남한 GNP의 1/16 수준이며, 1인당 GNP는 904달러로 남한의 1인당 GNP 7,466억 달러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중공업 및 군수산업 위주의 불균형한 경제정책,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北韓經濟는 심각한 결핍 및 병목현상, 투자재원 부족, 기술 및 설비낙후, 인적자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래에는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졌으며, 에너지 및 공업용 원부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50%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부족한 경지면적에 더해 병충해 피해확산, 농약부족, 경작방식의 실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어왔으며, 외화부족으로 인해 식량수입 역시 어려운 형편으로 값싼 중국산 옥수수를 대량 수입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4월 제9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성산 총리가 식량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만 보아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통일원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연간 식량수요는 600~650만 톤 정도이나, 최근 2~3년 동안 실질 생산량은 평균 400만 톤에 불과

하여 매년 약 2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도입량이 연간 100만 톤 정도였으나 1991~1992년 사이에 연간 3~4만 톤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석탄생산 역시 시설노후 등의 원인으로 증산이 불가능했으며, 석탄공급 차질과 설비노후 등으로 인해 화력 및 수력 발전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교역부문에서 1993년도 대외무역총액은 24억 8,000만 달러로서(수입 : 15억 4,000만 달러, 수출 : 9억 4,000만 달러) 對中國 邊境貿易의 급증 및 수출촉진 정책 등 무역량 증가 요인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총교역량 25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 총교역량은 정체상태를 보였다. 이는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의 수출상품 공급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역수지면에 있어서는 매년 5~6억 달러의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원조와 조총련계 송금으로 적자를 메워왔으나 이와 같은 외화 공급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북한의 외화난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⁴⁾

4) 1993년 말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채무 총액은 103.2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행, 「1993년도 북한GNP 추정결과」 (서울 : 한국은행 조사2부, 1994.6).

북한의 무역상대 국가별로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과의 교역량이 감소된 반면 1992~1993년 동안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늘어났으나, 1994년에 들어서에는 대중국 교역량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低賃勞動力을 활용하는 위탁가공교역이 북한과 일본, 그리고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국가간에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서 서유럽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 산업생산 위축으로 인한 교역감소를 막기 위한 '되거래무역'(중계무역)을 중시하고 있는 바, 일본·러시아·독일 및 동구권으로부터 차량, 철강, 목재 등을 수입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93년도 북한의 交易順位는 중국, 일본, CIS, 이란, 독일의 순이며, 이들 상위 5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남한을 포함하는 경우(남한과의 교역량은 이란 다음의 제5위), 북한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해 북한의 무역이 소수 대상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부터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 조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과 선봉 및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1992년 10월 이래 지속적으로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

해왔다(〈표-3〉 참조).

〈표-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제정 현황

시	기	외 자유 치 관 련 법 령
1984.	9. 8	합영법
1985.	3. 7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3. 20	합영법시행세칙
	5. 17	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세칙
1991.	12. 28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2.	4. 9	헌법제37조(외국과의 합영, 합작의 근거규정)
	10. 5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10. 16	합영법시행세칙(개정)
1993.	1. 3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0. 27	토지임대법
	11. 17	세관법
	11. 24	외국투자은행법
	11. 29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2. 30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1994.	1. 20	합영법(개정)
	2. 2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3. 27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4. 28	자유무역항규정
	6. 14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
	6. 27	외화관리법 시행규정
	9. 7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출처 :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집」 (서울 : 통일원, 1994).

또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은 1993년 말 이래 생산경영단위 개편에 역점을 두어 생산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공업 및 대외무역 분야의 일부 기업소를 자체 경영권을 확대한 연합기업소 형태로 전환하였다. 반면 자체 생산경영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일부 에너지 및 기계화학 공업분야의 연합기업소는 다시금 중앙의 직접적 관리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운영개선을 시도했다. 또한 1994년 2월에 있었던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은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국영농장경영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농업연합기업소」형태의 경영체제 개편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생산경영체제 개편은 공업분야의 경우 물질적 인센티브와 중앙의 통제를 적절히 강화·배합함으로써 기존 경제계획체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업의 경우 경작규모 확대와 농업용 원부자재 공급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생산 증대를 꾀하고 최근 만연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이 당면한 외화 및 물자부족난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중앙집중적 계획체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북한경제체제는 여전히 스탈린 경제체제의 기본 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농업 - 경공업 - 무역 제일주의 역시 향후 2~3년간의 조정기간 동안 3차7개년경제계획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산업구

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와 같은 체제의 본질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상황변화를 반영했을 뿐,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경제효율성 향상이나 시장기구의 활용 등을 시도하지는 않았다.⁵⁾ 다음 절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체제의 특징과 대외경제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北韓의 對外經濟體制

가. 對外經濟體制的 特徵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북한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⁶⁾

5)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역시 북한의 내부경제와의 차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경제특구'와는 구분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Seung-Yul Oh,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i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Seoul :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3), pp. 127~151 참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4.9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채택.

제3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

제38조 : 국가는 자립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북한헌법 제37조는 1984년 「습營法」 제정 이래 북한이 취해 온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나 북한은 대외경제영역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의 대외경제체제는 자급체제의 강조, 화폐 불태환성, 양자간 협정무역, 차별적 교역조건 등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 자급적 무역체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自給的 經濟體制 확립을 강조해왔다. 첫째, 북한은 대부분의 주요 생산원자재를 계획에 의해 배분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중앙계획 자체가 국제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본주의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급적 경제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

라고 보고 있다. 둘째, 대외의존적 산업구조는 군사안보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정책적 고려 이외에도 경제적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구조로 인해 북한계획당국이 효율적 무역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자급적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가 독점적 무역체제

북한은 근래에 다수의 무역상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가 독점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수출입 결정은 계획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해 수출증대 자체가 정책목표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수출은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위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 북한의 '무역제일주의' 역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한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획득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 뿐, 비교우위의 개발을 통한 경제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화폐의 불태환성

북한화폐는 硬貨와의 태환성이 없으며,⁷⁾ 북한지역 내의 외국인도 북한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데,⁸⁾ 이는 자원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구조와 외환부족, 그리고 국가 독점적 대외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화폐는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단지 수출입 계획의 작성과 실행을 위한 회계단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외무역체계하에서 북한의 국내 가격구조와 국제시장 가격구조는 차단되어 있으며, 비교우위 및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무역형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4) 양자간 협정무역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국가의 대외무역에서는 시장경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양자간 협정에 의한 무역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무역결제수단의 缺如, 경제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대외무역의 종속적 역할, 사회주의 국가간의 정치적 고려 등에 기

-
- 7) 최근 북한에는 비합법적인 물자거래를 위한 암시장이 창궐하고 있으며, 외화 암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식환율이 미화 1달러당 북한화폐 2.15원 수준인데 비해, 미화 1달러의 암시세는 북한돈 70~8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8) 북한 내의 외국인은 외화를 '돈바꾼표'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북한화폐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한 것이다.

협정무역체제하에서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일정기간 동안의 무역규모와 상품구성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지원 혹은 신용제공을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한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 동구 공산권, 중국과 협정무역으로 대외경제관계의 골간을 삼았으나, 1970년대에는 서방국가로부터의 시설재 도입을 시도했으며,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하여 서방자본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다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제한적 대외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정무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차별적 교역조건

시장경제의 자유무역지향적 체제하에서 무역 당사자들은 최저가격에 의한 수입과 최고가격 수출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간에는 정치적 고려, 객관적 무역결제수단 및 기준의 결여, 쌍무적 협정무역 관행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무역상대국 정부와의 협상에 의해 교역조건을 조정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중국 및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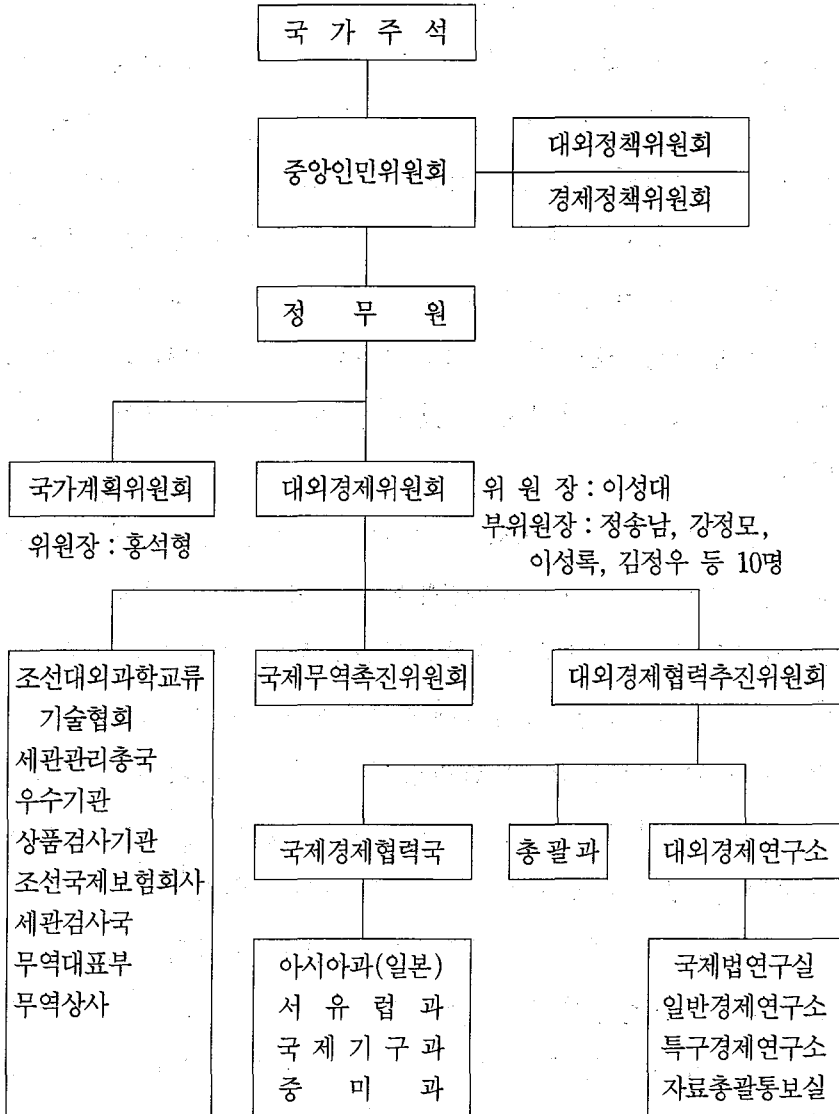
와의 원유 및 곡물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격기준이 매년 변하는 것은 국제시장 가격변동, 중·러의 경화결제 지향적 무역정책 등의 영향도 있으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교역조건 조정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나. 對外經濟 關聯 中央政府機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는 黨·政·軍이 주체가 되어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외경제 관련 분야에 있어서 당 혹은 군의 역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1992년 4월 제9기 4차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종래의 정무원 산하 무역부, 대외경제사업부를 대외경제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각 생산부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무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대외경제 관련 업무는 대외경제위원회가 전담하고 있고, 외환관리 및 대외경제 관련 은행은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는 과거 합영사업 및 외국과의 경제협정 체결 등 경제외교와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무역부와 통합됨으로써 무역정책 및 계획의 수립, 대외무역협정의 체결 등 무역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경제위원

〈그림-1〉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기구도



회는 북한의 모든 대외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한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외경제위원회는 해외 상주 무역기관을 두고 있는데,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북한대사관 및 영사관 내에 무역참사부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는 무역대표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서 관세검사국, 조선국제보험회사, 상품검사기관, 운수기관, 세관관리총국 등도 두고 있다.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무역상사는 외국무역상사와의 무역계약체결 등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북한정부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북한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未修交國과의 경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이성록(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미수교국과의 무역확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전체위원회, 상무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가 위원장이며, 미수교국과의 투자유치 및 협정체결이 주요 업무이다. 특히 이 기관은 1994년 4월 제9기 7차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및 외자유치 전담기관이 되어 중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인들과의 접촉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산하에 민간기업적 성격을 띠는 경제개발총국(혹은 경제개발총회사)을 설립하였고, 부위원장인 임태덕을 사장에 임명하였다.

한편 1992년 남북한간의 간접교역이 활발해지자, 북한은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를 설립하여 남한기업과의 무역과 남한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성록이 협회장으로 되어 대남한기업 교류창구를 단일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대외경제 관련 중앙정부기구로는 외환수급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외환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외환업무 관련 은행을 감독하는 재정부가 있다.

다. 貿易商社 및 銀行

북한의 모든 무역상사는 원칙적으로 대외경제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각급 정부기관도 필요에 따라 직영 무역상사를 가지고 있다. 정무원은 총리 직속인 봉화무역총국과 오산덕 무역총국, 사회안전부 직속인 대보무역회사, 동흥무역 등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는 삼천리총회사 등 별도의 직속 무역상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보위부는

조선신흥무역회사,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옥류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경제지도위원회 및 각 시도 인민위원회도 직영 무역상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軍部 역시 직영 무역상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민무력부는 무기수출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악산 무역상사 및 매봉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민무력부 산하의 호위총국은 칠성무역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산하의 대성무역상사는 북한 최대의 무역상사로 북한정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리부 39호실이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자회사와 운수회사, 5개의 수산업 관련 상사, 10여 개의 외국지사와 대성은행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재정경리부 직속 무역상사로서는 건설자재를 담당하는 만경무역상사와 재정경리부 건설국 직속의 백두산 무역상사 등이 있다. 또한 黨중공업부 직속의 은덕무역총국은 전문부문별 6개 무역회사와 은덕해운회사, 은덕은행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무역상사는 무역정책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관으로서 대외경제당국의 통제하에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 중앙예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며, 이윤의 일부는 정부재정 재원 충당을 위해 사용된다. 과거의 무역부 관리체제하에서는 광산물수출입상사,

수산물수출입상사 등과 같이 부문별 전담무역상사가 전담상품에 관한 수출입업무를 독점했으나, 1992년 대외경제체제의 개편 이후 특정의 공장 및 기업소나 협동조합 등과 직접 연계되는 수출입 전담상사가 많이 설립되었다.⁹⁾ 또한 무역형태 역시 단순한 수출입업무뿐만 아니라 제3국간 중계무역, 변경무역 등을 취급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合營企業 역시 생산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용 물자수입도 직접 행하고 있다.

근래에 북한은 외화난 타개책으로 어느 부서든지 필요한 외화를 자체 조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권력기관이 직영하는 무역상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상사들은 중앙계획에 의해 할당된 외화소득 목표 이외에 자체 사용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담당 영역 이외의 다양한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무역상사의 무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의 종류 및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조선중앙은행 : 1964.1 설립된 북한의 중앙은행이며, 발권은행으로 기타 은행의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내적 업무로는 화폐발행, 현금유통 조절, 현금 및 예산의 출납, 국내기업소간 혹은 기업소와 정부간의 각종 무현금결제의 청

9) 현재 북한에는 약 200여 무역상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 행정기관 및 기업소에 대한 유통자금의 공급, 무역은행·금강은행·대성은행에 대한 감독 등이 있다. 대외적 업무로는 공정환율의 결정, 외환 및 금매매, 內外國人에 대한 통화별 계정의 개설, 대외차관의 도입과 공여, 사회주의국가 및 비동맹국가와의 협정무역 결제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무역은행 : 1953.11 설립된 중앙은행 산하 기구로서 무역에 따른 결제업무와 지불 및 보증업무, 무역기관의 회화획득 및 지불에 관련된 신용업무를 주로 취급한다. 정부간의 쌍무협정에 의한 무역은 물론, 협정에 의하지 않은 서방국 및 개도국과의 무역에 대한 결제업무 및 이들 국가의 관련은행과 환거래 계약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무역환율을 결정·공표하며, 외화태환권(외화와 바꾼 돈표)의 발권, 무역기관 및 기업소의 對外支拂에 대한 재정적 통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성은행 : 1978.11 설립되었으며, 노동당 재정경리부 산하의 대성무역상사와 만경무역상사, 동해해운회사의 대외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리부 39호실이 관장하는 금 등 귀금속 거래를 취급하며 일반 외국환업무도 수행한다. 해외 자회사로는 오스트리아 빈에 금성은행이 있으며, 홍콩에 대성무역지사를 설치·운영하는 등 해외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금강은행 :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무역증가에 따라 결제

업무가 급증하자 이를 소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기계·금속·화학제품 등 광물 수출입을 전담하는 봉화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를 취급한다.

용악산 은행 : 인민무력부 산하 은행으로 용악산 상사 및 용악산 기술상사가 전담하고 있는 병기 및 군수물자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은행중 자금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덕은행 : 노동당 중공업부 산하 은덕상사의 수출입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 1987년에 조선낙원무역상사와 일본 Palace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합영회사, 무역상사, 기타 외국기업 관련 투·융자 및 대외송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 : 조총련 합영추진사업위원회와 조선 국제합영총공사가 공동출자하여 1989년 설립되었으며, 합영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및 대외경제관련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고려상업은행 : 재미교포단과 북한이 공동출자하여 1988년 설립하였으며, 공채발행 등을 통해 재미교포 자본유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3. 小結

본 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와 대외무역체제의 특징 및 기구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대외무역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인 자급적 무역체제, 국가독점적 무역체제, 화폐의 불태환성, 협정에 의한 물물교환식 교역형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차별적 교역조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은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각급 단위는 물론 郡이나 지방행정단위에 이르기까지 산하 무역상사를 설치하게 하고, 무역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원 가능한 수출자원을 개발하여 외화획득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무역상사의 증설이나, 부분적 무역권한의 분권화가 곧바로 국제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대외무역체제의 효율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외경제관계를 위한 은행 역시 금융기관 본연의 국제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기보다는 무역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담당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1990년대에 들어 가시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80년대 이래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제개혁과 연계된 대

외개방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체제개선책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역시 북한의 이와 같은 대외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북·중경제관계의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第 Ⅲ 章 北·中 貿易推移와 形態

1. 北·中 貿易推移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북한정부에 약 8,000만 달러에 달하는 無償援助에 더해 서평양, 고원, 정주의 철로건설을 지원했다. 또한 1960~70년대에 중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고 자금 및 기술원조를 시행했으며, 특히 1976년에는 북·중 양국이 공동건설한 ‘中朝友誼 送油管路’가 완공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한 경제원조와 상품무역,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상호간의 투자와 두만강개발계획 등 다자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통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무역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표-4>는 1950~94년 동안 북·중무역의 추이 및 무역수지를 보여주고 있다.¹⁰⁾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방향과 국제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대략 1951~56년, 1957~67

10) 1994년은 1월~11월 통계치임.

〈표-4〉 中國과 北韓의 貿易推移

(單位 : US\$ 100萬, %)

연도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중·북무역총액	북한 무역수지
1950	4.1(5.1)	2.5(5.5)	6.5(5.2)	-1.6(-34.9)
1951	19.0(48.7)	0.8(2.6)	19.8(28.4)	-18.2(-8.4)
1952	23.6(35.2)	1.8(5.8)	25.4(25.9)	-21.8(-36.3)
1953	49.6(53.1)	1.2(4.5)	50.8(42.3)	-48.4(-66.6)
1954	87.7(72.7)	2.4(8.2)	90.1(60.1)	-85.3(-91.2)
1955	79.8(56.2)	3.2(7.3)	83.0(44.6)	-76.6(-98.0)
1956	68.0(40.3)	6.1(9.9)	74.1(32.1)	-61.9(-107.3)
1957	40.2(28.5)	17.7(19.8)	57.9(25.1)	-22.5(-51.6)
1958	52.5(35.5)	38.9(41.6)	91.4(37.8)	-13.6(-54.4)
1959	78.0(35.2)	40.9(36.4)	118.9(35.6)	-37.1(-109.3)
1960	74.1(47.3)	48.2(32.8)	122.3(40.3)	-25.9(-9.7)
1961	70.2(36.6)	48.3(32.4)	118.5(34.8)	-21.9(-42.9)
1962	88.5(42.4)	49.2(30.1)	137.7(37.0)	-39.3(-45.0)
1963	95.8(42.7)	58.5(32.5)	154.3(38.2)	-37.3(-44.4)
1964	99.3(42.1)	59.1(31.8)	158.4(37.5)	-40.2(-50.1)
1965	06.7(39.2)	75.7(35.9)	182.4(37.8)	-31.0(-61.4)
1966	26.2(46.2)	80.4(34.9)	206.6(41.0)	-45.8(-42.7)
1967	03.0(35.3)	75.4(30.2)	178.4(32.9)	-27.6(-41.9)
1968	73.9(20.6)	41.7(16.7)	115.3(18.9)	-32.2(-109.1)
1969	51.9(12.4)	40.9(14.1)	92.8(13.1)	-11.0(-130.0)
1970	67.0(15.4)	49.3(13.6)	116.3(14.6)	-17.7(-71.5)
1971	103.8(16.1)	65.8(20.0)	169.6(17.4)	-38.0(-313.5)
1972	180.9(24.0)	107.8(25.7)	288.7(24.6)	-73.1(-333.5)
1973	239.3(24.1)	107.6(21.2)	346.9(23.1)	-131.7(-482.6)
1974	267.6(18.8)	133.0(18.6)	400.6(18.7)	-134.6(-712.0)
1975	312.5(24.5)	179.8(21.8)	492.3(23.5)	-132.7(-447.8)
1976	275.0(27.6)	131.9(22.6)	406.9(25.8)	-143.1(-413.0)

〈표 4〉 계속

연도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중·북무역총액	북한 무역수지
1977	249.9(28.5)	133.8(17.8)	383.7(23.5)	-116.1(-122.9)
1978	253.8(23.6)	203.3(17.0)	457.1(20.1)	-50.5(123.2)
1979	348.7(23.9)	300.1(20.1)	648.8(22.0)	-48.6(33.6)
1980	411.7(22.6)	275.8(17.0)	687.5(19.9)	-135.9(-197.0)
1981	336.6(21.4)	214.7(16.4)	551.3(20.4)	-121.9(-261.3)
1982	311.2(19.5)	278.1(21.6)	589.3(20.5)	-33.1(-303.8)
1983	302.1(20.5)	232.2(20.4)	534.3(20.4)	-69.9(-335.8)
1984	253.0(17.9)	251.7(21.2)	504.7(19.4)	-1.3(-228.2)
1985	260.4(14.6)	241.8(19.8)	502.2(16.7)	-18.6(-563.9)
1986	276.5(13.2)	254.0(18.7)	530.5(15.3)	-22.5(-746.1)
1987	308.0(12.0)	217.4(14.6)	525.4(12.9)	-90.6(-1091.8)
1988	345.4(11.2)	233.7(13.0)	579.1(11.9)	-111.7(-1301.2)
1989	377.4(13.0)	185.4(11.0)	562.8(12.3)	-192.0(-1219.2)
1990	358.2(12.3)	124.6(6.7)	482.8(10.1)	-233.6(-1062.6)
1991	524.8(30.7)	85.7(4.6)	610.5(12.8)	-439.1(-700.0)
1992	541.1(34.8)	155.5(17.0)	696.6(28.2)	-385.6(-638.2)
1993	602.4(39.2)	297.3(31.7)	899.6(36.3)	-350.6(-600.4)
1994,1 ~11	385.3 (—)	183.8 (—)	569.1 (—)	-201.5 (—)

주 : ()안은 북한의 수출입 및 수출입 총액중의 비중과 무역수지 총액

자료 : 1950~82 : 중국경제연감편집위원회, 「중국경제연감」, 각년판
 ; 1983~91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적요」, 각년판 ; 1992~93 : 대한무역진흥공사, 「'92, '9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방현안레포트 93-5호, 94-2호 ; 1994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북경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11).

년, 1968~71년, 1972~84년, 1985~90년, 1991년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51~56년 동안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복구기간으로서 북·중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후 복구기간 동안에는 북한전체 무역액중 北·中貿易이 약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기간의 특징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적자로서 이는 실질적인 무역적자 발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북·중무역이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성 물품반입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북한경제가 전후복구기를 거쳐 1957년부터 본격적인 제1차5개년계획기간으로 진입하게되자, 1957~67년 기간 동안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對中國貿易赤字도 그 절대규모가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은 북한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수출증대로 인해 북·중 교역량이 급증하여, 1966년도에는 총교역량이 2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한편 북한의 총교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복구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북한의 대중국 입초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국의 지원성 수출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8~71년 기간은 중국에서의 文化大革命이 본격화한 시

기이며, 동시에 북한이 국방력 증강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은 중국경제의 혼란 및 북·중정치관계의 냉각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의 총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15%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 시기로부터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감소했음과 점차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1970년 4월 중국 周恩來 총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경제관계는 개선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이래 북한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1972~84년 동안 북·중무역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총무역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1년보다는 증가했으나, 그 이전의 시기보다는 감소한 평균 20%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7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액중 중국의 비중이 낮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북한의 對西方國家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1984년 북한은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시도하였으며,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은 심화되었고, 소련 역시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과 함께 경

제개혁을 꾀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개혁 시도는 중국의 그것에 비해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소련경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 초반의 대서방국가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 심각한 외채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대북한 군사·경제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성 교역의 확대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5〉 참조).

〈표-5〉 北韓貿易中 中國과 蘇聯의 比重變化

(單位：%)

연 도	구 분	蘇 聯	中 國
1984	수 출	38.2	20.8
	수 입	33.3	17.8
1987	수 출	46.0	14.6
	수 입	54.1	11.9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해외경제정보센터,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1992.9.

한편 198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속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로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80년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이 경제개혁에 착수했던 1978년부터 1979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3억 달러

에 도달한 이래, 1988년까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2억 5,000만 달러 정도의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나, 1989~1991년까지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가 소원해진 1992, 1993년에는 다시 빠른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는 비록 중국 경제개혁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상품 수요가 증가했지만, 1970년대 말 이래 북한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빠지게 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능력이 제약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경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표-4〉에서 주의할 점은 북한의 對中國 貿易赤字의 성격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전 북한의 대외무역 적자총액중 중국은 거의 50%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북·중정치관계로 미루어 보아 이는 대부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형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감소했으며, 중국 국내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7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의 경제지원성 수출은 증가했으나, 북한의 對西方 負債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총무역적자액중 중국의 비중은 감소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본격화되었던 1982년 이후 1987년 무렵까지는 중국경제의 과열로 인한 수요폭발로 중국경제의 대북한 수출능력이 제약되었으며, 이 시기에 북한의 대중국 무

역적자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고르바초프의 구소련과 북한이 다시 군사적·경제적으로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자 지원성 교역으로 인한 중국의 대북한 무역적자는 급증하게 되고, 특히 구소련의 정국이 혼란하게 된 1990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4억 4,000만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어 북한 총무역적자액의 50%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성 교역은 곧바로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상황하에서, 북한은 더 이상 對中國 貿易赤字(중국의 지원성 수출)확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은 1992~1993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경제의 수출여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체제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를 수입

〈표-6〉 北韓의 主要貿易相對國 比重

(單位：%)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 CIS(USSR)	53.8	14.1	11.8	13.4
(2) 中 國	10.1	23.6	28.2	36.3
(3) 香 港	4.7	6.4	6.3	4.4
(2) + (3)	14.8	30.0	34.5	40.7
(4) 日 本	10.1	19.7	19.5	19.1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판.

하기 위해 북한이 변경무역 등을 통해 출혈적 수출을 시도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소련에 편중된 북한의 무역패턴 역시 소련이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접어들기 전인 199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표-6>에서 보듯이 1990년도에 50%를 상회하던 소련의 비중이 1991년 이후 10%대로 감소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北·中邊境貿易의 확대와 중국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성 수출 등에 힘입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액을 더할 경우 약 41%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北·中 交易의 商品構成

북한은 1950년 8월 18일 중국과 처음으로 물자교환의정서를 통한 양자간 협정무역을 시행한 이래 매년 물자교환의정서에 의한 물자교역 방식을 유지해왔다. 또한 이에 더하여 1958년에는 1959~1962의 4년간 장기 물자교환의정서를 체결했으며, 1962년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장기 물자교환의정서를 체결해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 원조 및 차관협정을 통해 중국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시행되어 왔으며, 원조나 차관 역시 주로 현물지원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상환방

식 역시 현물상환의 형태를 채택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지원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3년 11월 23일 김일성과 주은래 사이에 발표된 한국전쟁 비용지원, 1954~1957년 동안 매년 실시된 현금 및 생산설비 무상원조, 1958년 및 1960년의 생산설비 구입용 차관,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시행된 상호경제원조 협정에 의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¹¹⁾

교역상품의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협정(물자교환의정서)에 의한 무역은 주로 공업용 원자재로 이루어졌다. 특히 1950년대 교역초기에 중국은 석탄과 건축재료 및 각종 공업원료 등을 공급했으며, 중국에 대해 북한은 광산품, 해산물, 과일 등 1차상품을 공급했다. 그러나 북한이 구 소련 및 중국과 동구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지하여 공업화를 추진했던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해 1차상품에 더해 비료 등 화학제품과 비철금속류, 철강 등 공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대부분 생산시설재와 직물 및 교통운수기재, 식량 등 완제품이나 최종소비재 형태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 중국의 유전이 개발되면서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코크스와 석유는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이 되었다.

11) 상세한 내역은 <부록-2> 참조.

북한경제의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1960년대 이래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품목은 코코스와 석유, 강재, 화공제품, 면화, 설탕, 곡물이었으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석탄, 시멘트, 철강, 화공제품, 해산물 및 과일 등으로 대별되며, 이와 같은 상품구조는 1990년 이후 최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7〉은 1982~1991년 동안 중국해관통계에 나타난 北·中交易 상품구조 개황을 산업표준분류(SITC : The Standard Industrial Trade Classification, Rev.2)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다양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공업용 재료(SITC 6), 석탄 위주의 광물성 연료(SITC 3), 식용 및 비식용 원재료(SITC 0, 2)로 구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4년 「합영법」 제정 이래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물자 수입을 위해 수출증대에 노력해왔음을 나타낸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 비중의 변화는 1980년대 이래 악화된 북한 경제난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용 재료(SITC 6)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 반면, 가공도가 낮은 석탄 위주의 광물성연료(SITC 3)와 1차 상품 위주의 비식용 공업용원료(SITC 2) 비중이 점차 높아

〈표-7〉 북한의 주요 품목별 대중국 교역 추이

주요품목 (SITC)	1982		1984		1988		1989		1990		1991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0.식품/식용 산동물	19 6.3	-	33 12.0	9 3.9	38 16.2	34 9.9	29 5.7	76 20.2	20 16.3	51 14.2	9 10.0	55 10.5
2.비 식 용 원 재 료	43 14.2	-	29 10.7	5 2.1	37 15.8	60 17.4	35 18.9	48 12.7	18 14.4	45 12.6	23 26.8	41 7.7
3.광물성연료 및 관련제품	61 20.1	246 87.0	54 19.5	193 84.0	58 24.8	174 50.4	51 27.6	145 38.5	33 26.8	138 38.5	29 33.3	226 43.1
5.화학 및 관련제품	9 2.8	-	12 4.5	5 2.3	15 6.4	15 4.3	7 3.8	29 7.7	4 3.0	37 10.3	9 10.6	43 8.2
6.원료별 재 료	162 53.1	-	147 53.2	2 0.8	89 38.0	28 8.1	60 32.4	33 8.8	46 37.2	44 12.3	16 18.4	65 12.5
7.기계 및 운송장비	-	21 7.3	-	12 5.0	0.3 0.0	26 7.5	0.6 0.3	30 8.0	0.8 0.0	30 8.4	-	44 8.5
8.잡 제 품	-	-	0 0.1	1 0.2	0.2 0.0	5 1.4	0.2 0.1	9 2.4	0.2 0.0	6 1.7	-	38 1.7
9.특수취급품	-	-	-	-	-	1 0.3	2 1.1	7 1.9	2 1.5	6 1.7	0.5 0.5	9 1.7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해관통계」 (북경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각호).

진 상황은 북한경제의 공업제품 공급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한계에 이르러,¹²⁾ 더 이상 중국의 경제지원성 수출 증대가 불가능해진

반면,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축소로 인해 북한은 생필품 등 부족한 물자를 對中國 邊境貿易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공업제품 공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철강 및 철광석과 시멘트, 목재, 해산물 등 중국 동북3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면, 북한의 수요를 희생해서라도 출혈적인 수출을 해야했다. <표-4>에서와 같이 1992~1993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는 북한의 국내 수요를 희생한 수출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으로는 93년의 경우 총수출액의 약 70%를 점유하는 강철이 있다. 그밖에 시멘트, 석탄 위주의 광물연료, 철광석, 어류 등을 포함한 상위 5품목의 수출액을 합하면 북한의 대중국 총수출액중 약 87%를 점함으로써 북한의 수출능력이 소수 1차산품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강철, 시멘트, 목재 수입이 급증한 것은 경제개혁 심화에 따른 중국 동북3성의 경제건설 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7> 참조).

1993년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석유 및 제련용 코크스탄 위주의 광물연료가 2억 3천 8백만 달러, 곡물이 9천 8백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이들 두 품목이 전체의 55%

12) <표-4> 참조.

이상을 차지했다.¹³⁾ 1992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입총액중 이들 품목의 비중이 53%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北韓經濟의 생존을 위한 기초산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도에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은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식량부족에 따른 곡물수입선을 호주, 캐나다 등지로부터 중국으로 전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 북한이 대중국 곡물수입이 전년대비 43%나 증가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설탕, 면화,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화학섬유 등이 있다.

1993년에는 전년에 비해 식품류와 화학섬유류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 기기 및 부품과 고무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이 수출상품용 생산원자재의 수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타분야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8〉 참조). 특히 면화와 화학섬유

13) 구소련의 경우 대북한 수출품목으로는 석유, 석유 관련 제품, 기계, 설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련해체 이후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경화결제에 따른 상업성 거래 위주로 전환되면서 목재, 승용차, 화물자동차, 의류, 비료 등으로 다변화되어가고 있다. CIS의 대북한 수입품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철강제품, 텔레비전 등을 들 수 있다.

의 수입이 감소한 것은 한국 및 홍콩 등지의 기업에 의한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직접 생산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8〉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1992~1994

()는 수출총액중 비율(%)

순위	1992	1993	1994
1	철강 (43.0)	철강 (69.9)	철강 (65.9)
2	광물성 연료(석탄) (11.9)	시멘트 (6.5)	시멘트 (8.2)
3	철광·슬래·회 (11.0)	철광·슬래·회 (4.2)	어류 (6.7)
4	어류 (8.2)	어류 (3.9)	모피·인조모피 (3.9)
5	시멘트 (3.4)	광물성 연료(석탄) (2.8)	철광·슬래·회 (3.6)
6	목재·목재제품 (3.1)	목재·목재제품 (2.5)	목재·목재제품 (3.1)
7	아연·아연제품 (2.2)	선박·수송구조물 (2.1)	구리 및 제품 (0.9)
8	종자·과실·식물 (2.1)	플라스틱제품 (1.1)	광물성 연료(석탄) (0.8)
9	플라스틱제품 (2.0)	비료 (0.9)	건 (0.6)
10	유기화학제품 (1.7)	의류 및 부속품 (0.7)	비료 (0.6)
	137,896 (88.7)	281,188 (94.6)	173,543 (94.4)

자료 : 〈부록-1〉에서 필자가 정리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한은 1994년도에 전반적인 대외 무역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994년 1월~11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31.9%, 수입은 29.2% 감소하였다. 1994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철강의 비중은 1993년도와 비슷하지만, 수출규모는 전년도 동기 대비 36.3% 감소했으며, 석탄의 수출은 비중도 작아졌으며, 수출규모 역시 전년동기 대비 81.7%나 감소하였

다. 이는 북한의 에너지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탄의 공급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측면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11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9.3% 감소했으며, <표-9>에서 보듯이 곡물(옥수수)의 비중이 1993년도의 16.2%에서 6.2%로 낮아졌으며, 수입규모 역시 전년대비 75.4%나 감소하였다. 또한 1993년도에 주요 수입품목이던 당류·설탕·과자와 제분공업제품이 1994년도에는 상위 10대 수입품목에서 빠졌으며, 플라스틱제품 및 화공제품의 수입비중이 늘어났다. 한편 少量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1994년도에는 중국으로 2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미곡을 수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1994년도에는 옥수수를 포함한 식용품목의 수입이 줄어들고 공업용 원료수입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1993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94년에는 더 이상 內需部門을 희생하는 출혈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북한체제 생존을 위해 에너지 및 곡물 수요의 일부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원조계획을 통해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⁴⁾

둘째, 1994년도에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량이나마, 북한의 대중국 미곡 수출물량이 늘었으며, 북한의 대중국 비료수입량이 1993년도의 34만 달러 수준에서 1994년도에는 370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10배이상 늘었는데 이는 곡물생산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과 체제의 특수성으로 미루

〈표-9〉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 : 1992~1994

()는 수입총액중 비율(%)

순위	1992	1993	1994
1	광물성 연료·광물유 (41.1)	광물성 연료·광물유 (39.5)	광물성 연료·광물유 (44.1)
2	곡물 (12.7)	곡물 (16.2)	곡물 (6.2)
3	당류·설탕·과자 (3.2)	전기·전자기기·부품 (3.1)	플라스틱제품 (3.7)
4	종자·과실·식물 (2.7)	고무제품 (2.7)	전기·전자기기·부품 (3.1)
5	면 (2.7)	비누·세제 (2.5)	화학제품 (2.9)
6	전기·전자기기·부품 (2.7)	종자·과실·식물 (2.3)	보일러·기계류 (2.4)
7	채분공업 제품 (2.4)	철광·슬랙·회 (2.2)	인조스테이플 섬유 (2.4)
8	보일러·기계류 (2.3)	당류·설탕·과자 (1.8)	종자·과실·식물 (2.3)
9	인조스테이플 섬유 (2.2)	면 (1.7)	고무·고무제품 (2.2)
10	고무·고무제품 (1.9)	철강 (1.7)	철광·슬랙·회 (1.8)
	399,263 (73.8)	444,073 (73.7)	273,426 (71.0)

자료 : 〈부록-1〉에서 필자가 정리.

- 14) 특히 1994.7. 김일성 사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조문 형식을 빌어 곡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하의 무상원조의 경우 중국해관통계 등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 볼 때, 1994년도에 북한이 어느 정도 식량증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곡물수입 규모를 급속히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1994년도에 北·中貿易 상품구조 변화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북·중교역 상품구조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비록 1991~1993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신속히 증가하였으나, 과거의 양국간 협정에 의한 무역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과 중국간의 상품교역은 여전히 원유와 곡물, 강철과 석탄 등 상호 필요한 소수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상품구조의 변동폭이 큰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수출상품 기반이 취약하고, 상품수입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북·중교역 패턴이 양국상품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절대공급량의 다과를 감안한 바터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1992년도부터 종래의 국가간 협정에 의한 바터무역에서 경화결제로 무역형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거래방식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⁵⁾ 또한 교역상품이 대

15) 한국측의 소식원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북한의 대중국 총 교역의 50%는 경화결제를 수반하지 않은 물물교환 및 청산계정으로, 30%는 경화결제로, 그리고 나머지 20%는 민간부문의

체로 1차상품이거나 생산의 우회도가 낮은 까닭에, 국제무역을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구조의 분화 역시 매우 느린 편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중국은 여전히 정상적인 무역경로 이외의 경제원조를 비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제지원 형태가 대북한 거래에 대한 우호가격 적용 및 청산계정상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탕감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개혁 진척에 따라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의 지원이 어려워졌으므로, 중국은 최근 대부분의 대북한 거래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고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 역시 축소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생존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곡물 및 에너지 수요의 일부는 특별지원 형태를 통해 원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경태왕을 통한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내외통신」, 1993.3.25 참조). 무역상품가격 역시 상품간의 물물교환 비율을 우선 협의한 후 事後的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北·中 貿易形態

가. 邊境貿易

최근 북·중무역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변경무역의 급증이다. 대외무역환경 변화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점차 국제시장가격 적용(〈표-10〉, 〈표-11〉 참조)¹⁶⁾ 및 경화결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교역형태의 변경무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⁷⁾

-
- 16) 중국측의 대북한 수출용 원유에 대한 국제가격 적용으로 인해 북한의 원유도입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원유도입량은 199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소량 감소했다. 그러나 원유와 곡물 등은 중국의 중앙정부 관할 품목이며, 북한의 대중국 원유 및 곡물 도입은 대체로 정부간의 협정에 의한 청산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경제지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17)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무역은 수출가능한 품목리스트 제출→가격협상→수출입 균형가능한 거래수량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초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중국 길림성의 대외무역대표단이 8일간 북한을 방문한 결과 수출입상당 총액은 9,570만 US\$에 달했으나, 그중 현금거래액은 단지 120만 US\$에 불과했다. 이는 북·중변경무역의 대부분이 아직도 바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10〉 年度別 北韓의 對中國 原油導入量 및 價格變化 推移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原油導入量(千ton)	1073.5	1062.6	1101.9	1005.6	1033
單價(US\$/ton)	60	58	126	137	135
中國의 全體輸出	24338	23979	22600	21510	-
單價(US\$/ton)	113	142	131	129	124

자료 : 1989~91 : 일본무역진흥회,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p. 64 ; 1992 :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북방현안레포트 93-5호.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1993」, p. 642 ; 1993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 (북경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

〈표-11〉 中國의 原油, 옥수수 對외수출 單價 比較¹⁸⁾
(단위 : US\$/ton, FOB가격)

	원 유		옥 수 수*	
	1992	1993	1992	1993
세계평균	129.0	123.9	114.8	104.0
북한	137.3	135.4	116.0	107.3
한국	116.0	115.8	116.3	105.1
미국	133.1	121.6	112.1	100.8
싱가폴	111.5	96.7	114.0	101.1

주 : * 종자용 제외.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

- 18) 〈표-11〉에서 대북한 수출단가는 오히려 타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한편 북한의 결제방법에 따른 부담을 추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측면과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압력의 일환으로 적용가격을 높였을 가능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변경무역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1966년 이후 중국 문화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82년부터 길림성의 圖們市를 중심으로 재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 요녕성의 단둥 및 길림성의 개산둔, 삼합, 남평, 혼강, 집안을 통해 북·중간의 상품 및 인적래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에 따라 훈춘 역시 대북한 경제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역시 북·중 변경무역을 활용하기 위해 신의주, 혜산, 남양, 회령 등지에 총 140여 개의 중국상품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표-12〉 1991년도 주요 북·중변경무역 지역 개황

(단위 : 만톤, 명)

지 명	통관물품톤수	통과연인원
丹東(철로)	172.9	30,572
(육로)	3.4	-
圖們(철로, 육로)	125	90,000
開山邨(육로)	북한으로부터 목재1만M ² 반입	
三合(육로)	2.4	33,000
南坪(육로)	-	20,000
渾江(육로)	3.9	27,429
集安(철로)	4.6	17,000

자료 : 經濟管理出版社, 「中國口岸概覽」(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2)으로부터 필자가 정리.

〈표-13〉 北韓의 對吉林省 邊境貿易(1986~1992)

(單位：萬 스위스 프랑)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총액
1982	51	52	103
1983	535	664	1,199
1984	2,335	535	4,445
1985	5,229	2,335	10,987
1986	4,184	5,229	8,656
1987	6,046	4,184	12,772
1988	7,926	6,046	15,796
1989	11,681	7,926	22,856
1990	6,650	11,681	14,802
1991	6,642	7,266	13,908
	(4,428)	(4,844)	(9,272)
1992	-	-	21,154
			(14,103)

주 : 1) () 안은 91, 92년도 걸림성 美달러貨 공식발표치임.

2) 1993년 말 북한의외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화 1달러는 1.5 스위스 프랑에 해당함. 91, 92년도 수치는 필자가 이를 적용 환산.

자료 : 吉林省 經濟貿易委員會 統計, 韓洪錫, 「中國における邊境貿易の現状と役割」, アシア經濟研究所, 「アシア經濟」, 1993.7, p. 79에서 재인용.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경무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1993.8.

양국간 변경무역은 「北·中間 邊境貿易 擴大方案」 협의(1988.6)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國境貿易管理 緩和措置」(1992.11)로 인해 중국측의 수입제한이 폐지되어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에 北·中邊境貿易의 주요 지점을 통해 통관된 물품은 약 35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통과 연인원도 20만명을 초과하였다.

1992년 북·중변경무역 실적은 길림성의 1억 4천만 달러와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는 遼寧省의 교역액을 감안할 때,¹⁹⁾ 최소한 2억 4천만 달러(양국 총교역액의 3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⁰⁾(〈표-14〉 참조).

〈표-14〉에 의하면 1993년도에는 중국의 동북3성과의 총교역액이 약 7억 3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수치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현재 중국과 북한간의 교역은 중국세관 통계상 구분이 불가능한 중국 중앙정부의 원조성

19)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no. 407 (1993.1), p. 18,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KDI 정책포럼」, 제31호 (1994. 1)에서 재인용.

20) 1992년 현재 양국이 변경무역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품목은 약 200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해산물, 목재, 철강, 석탄, 은, 마그네슘 등의 1차산품이며, 자동차·화학비료 등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재수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곡물·식용유·통조림 등의 식료품 및 지방특산물과 축산물, 경공업 및 방적제품, 화공제품, 전기기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소관 품목이 아닌 원유·석탄·코크스탄 등의 연료나 원자재의 변경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출처: 吉林省經濟貿易委員會 統計,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에서 재인용).

〈표-14〉 1993년도 중국동북지방의 대북한 변경무역액

(단위 : US\$ 만)

지 역	대북한 수출	대북한 수입	총 액
길 립 성	22,962	24,164	47,126
요 녕 성	4,600	4,000	8,600
흑룡강성	10,449	6,448	17,897
합 계	38,011	34,612	72,623

자료 : 「外貿調研」, 第12期, 1994.4, 대한무역진흥공사, 「'93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북방현안레포트 94-2에서 재인용.

대북한 수출, 변경무역, 중개무역 등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계자료원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표-14〉에서 동북3성의 대북한 수출액과 중국전체 수출액과의 차액은 곧 중국의 대북한 수출상품중 원유와 코크스, 곡물 등 중국의 중앙정부관리하에 있는 품목의 수출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명확히 수출입 관할권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들 품목 이외에 모든 대북한 수출이 동북3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북3성이 자체 생산한 수출품이나 자체 수요용 수입이 아니라도 일단 통계상으로 동북3성의 변경무역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곡물과 원유 등 주요 국가관리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과거의 북·중경제관계로 미루어 보아, 중앙정부차원의 支援性 輸出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²¹⁾ 이로 미루어 볼 때, 원유 등 국가관리품목을 제외하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대체로 수지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교역상의 수지평형은 일반적인 다자간 무역관계 속의 수지평형이 아니고, 상호협상에 의한 바터제 교역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14>에 제시된 북한의 대중국 동북3성 수출총액이 중국해관통계상의 대중국 북한수출총액보다 큰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표-14>의 자료출처는 동북3성 경제위원회 등이므로 해관통계와 같이 통관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일 가능성이 크다.²²⁾ 둘째, 중국측의 많은 무역회사가 對北韓 交易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사의 교역실적을 과대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수입품의 해관신고 가격과 실질평가 가격이 상이할 가능성

21) 곡물 및 원유 등 지원성 수출에 대한 결제는 청산계정으로 처리되며, 이는 중앙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결제시일이 연기되거나, 지원의 명목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 경우, 북한이 상품납기를 잘 지키지 않는 까닭에 계약금액과 통관금액은 종종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 크다.²³⁾

이러한 통계상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간의 변경교역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화남 및 화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개혁·개방 추진 속도가 뒤떨어졌던 동북3성의 개발붐에 따른 북한산 기초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으로 인해 중국산 상품의 수요가 큰 만큼 비록 바터제 형식의 초보적 무역형식이나마 양측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23) 이 경우 관세절감을 위해 해관신고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24) 북·중변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4년 초 전문업체 대표로 구성된 길림성 대외무역대표단이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 수출입 상담액이 9천 5백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1994년 3월에는 단동시의 왕준련 부시장 인솔하에 무역상담대표단이 1주간 북한을 방문하여 1천 9십만 달러의 수출입계약을 성사시키고, 1천 9백만 달러 상당의 수출입의향서를 교환했다. 북한 역시 1994년 5월 단동시에서 개최하는 무역촉진회에 시찰단을 파견했으며, 단동시 역시 평양에서 단동상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각호).

나. 仲介貿易

북·중무역관계에 있어서 중개무역은 대부분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15>에서 보듯이 홍콩의 대북한 총수출액중 90%이상은 홍콩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북한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차지한다. 이는 홍콩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계 혹은 중개무역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교역상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콩이 북한에 대해 再輸出하는 상품중 8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콩-북한 무역은 사실상 또 하나의 북·중무역형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수지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홍콩의 대북한 수출이 월

<표-15> 홍콩의 대북한 교역 실적

(단위 : US\$ 백만)

구 분	1990	1991	1992	1993
홍콩의 수출	107.6	124.3	107.0	78.5
(자체수출)	(12.1)	(12.3)	(10.1)	-
(재수출)	(95.5)	(112.0)	(96.9)	-
홍콩의 수입	28.3	39.8	48.6	30.2
합 계	135.9	164.1	155.6	108.7
무역수지	79.3	84.5	58.4	48.3

자료 : 홍콩정청통계를 US\$ 1 = HK\$ 7.7로 환산하였음.

등히 많아서 홍콩의 대북한 무역흑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는 홍콩의 무역흑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홍콩이 북한의 주요 물자구매 창구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대상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이는 주로 최근 북한이 수출촉진 정책하에 홍콩상인과의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홍콩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낙후된 상품포장기술로 인해 수출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한 까닭에 홍콩의 발달된 상품포장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수출촉진이 가능한 점 역시 홍콩경유 仲介貿易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자체 수출은 잡제품, 장신용구, 술, 음료, 방직용직물 등을 주요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의류와 의류용 장신구는 북한에서의 임가공용으로 수출되는 원자재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도에 다른 품목들은 북한의 外貨難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의 대북한 수출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홍콩이 임가공용 원부자재의 주요 공급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콩의 재수출 부문에서도 방직물이 재수출 전체 금액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제1의 품목이며, 임가공수출용 원자재로 볼 수 있는 방직물, 의류, 의류용 장신구, 잡제품 등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중요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2년도에 홍콩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의류, 농수산물, 비철금속, 전기기기, 방적용직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의류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홍콩간의 주교역 형태가 임가공교역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홍콩의 대북한 수입액중 의류의 수입은 1992년도에 72%나 증가하였고, 사무통신기기, 전기기기, 특수산업용기계, 가죽제품, 유기화합물 등도 증가하였다. 반면 홍콩의 금속제품 수입은 북한의 에너지 및 원자재난으로 인한 생산부족으로 수입규모가 50% 가까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第Ⅳ章 相互投資 및 多者間 經濟開發計劃

1. 相互投資

무역 이외의 북·중경제관계의 통로로는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등장하기 시작한 北·中 상호간의 투자 활동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래 1990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건수는 10여 건에 달했으며, 북한 역시 北京, 延吉, 丹東市 등에 수십여 건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합작회사 설립의 예로서 1994년 4월에는 「中朝友誼泥炭(土炭)生化學複合肥料工場」이 착공되었으며, 완공될 경우 연간 2만 톤의 토탄생화학비료를 생산하게 된다. 이 합작계획에서 중국측은 기술과 전문가 및 설비를 제공하게 되며, 북한측과의 투자비율에 따라 생산품을 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延吉의 鮮虎企業集團은 북한의 靑津東港 사용권(50년)을 획득했으며, 이와 관련 회령-청진 구간의 도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기업인 길림성 연길시 소재 延吉公共交通物資貿易商社는 북한의 관계당국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人民幣 3억 7천만원(약 4천 5백만 달러)을 투자하여 청진항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호텔 및 도로건설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그러나 무역 이외의 북·중경제관계는 아직 그 규모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이며, 실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 투자활동이 무역에 비해 저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경제체제와 중국경제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중국측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윤동기의 합작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나진·선봉을 포함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둘러싼 북·중·러 3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도 무역 이외의 경제협력 경로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多者間 經濟開發計劃內에서의 北·中關係

무역과 상호투자 외에 1990년대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또 다른 차원의 북·중경제관계를 구성하고 있

25) 「大公報」, 홍콩, 1994.1.26일자 참조. 중국은 이미 1992년 11월에 러시아측과 자루비노항을 중계무역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중국측이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루비노항 확장공사와 훈춘과의 철로 연결작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동해안 진출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항구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동북지방개발 및 일본과의 통상을 위한 주요한 항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²⁶⁾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주관하에 몽골 울란 바토르에서 개최된 정부간 국제회의인 「동북아 소지역 계획 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Meeting)에서 두만강지역개발을 UNDP 제5차 계획(1992~1996)의 동북아시아 협력사업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국 정부차원의 협의 대상이 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관련국(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차원의 협의체인 계획관리위원회(PMC :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두만강지역을 관광, 해운,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동 지역의 잠재력 실현을 도모하며, 단기적으로는 역내의 관세법 조정 등을 통해 관련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UNDP 개발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초로 제1차 PMC회의(서울)에서는 개발대상 지역으로서 두만강 경제지대(TREZ : Tumen River Economic Zone),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 Tumen River Economic

26)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은 1990년 7월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센터(East-West Center)와 중국 길림성 과학기술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연구소(Asian-Pacific Institute of China) 공동 주최로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학술회의」라는 민간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되었다.

Development Area), 동북아시아지역개발지구(NEARDA :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 등이 거론되었다.

TREZ는 두만강 하구지역의 3국간 접경지역인 중국의 훈춘-방천,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잇는 약 1천km²의 소삼각지역을 가리키며, TRED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북한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약 1만km²의 대삼각지역을, NEARDA는 한반도 전체, 몽골, 중국 흑룡·길림·요녕성, 극동 러시아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발계획은 TREZ이나, 이 또한 접경3국(북한, 중국, 러시아)의 참여입장이 각각 다른 까닭으로 다자간의 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의 추진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접경3국중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한 국가로서 주요 목적을 동북부지역 개발의 핵심인 東海로의 출해권을 확보하면서²⁷⁾ 변경무역 확대를 통한 동북3성 지역경제 개발에 두고 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27) 중국이 북한 혹은 러시아의 동해안 항구를 사용하는 경우, 일본으로의 수송로는 대련을 통하는 것보다 약 1,000km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83.7.27 북한과 청진항 사용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중국-북한간의 도로망 미비, 청진항의 항만시설 낙후 등으로 인해 중국 동북3성의 사용실적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부록-2> 참조.

동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다자간 경제개발계획을 적극활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경쟁시킴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²⁸⁾

한편 북한은 자국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지역개발계획의 중심으로 하여 수출가공기지를 건설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중계기지로서 나진-선봉지역의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 지역의 다자간 경제개발계획 진전에 따른 영토에 대한 통치권, 토지임차 등 문제와 국제관리체계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교적 적극적인 중국 및 북한과는 달리 러시아는 두만강 지역 다자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두만강유역의 핫산지역의 철도망 건설과 포시에트, 자루비노항의 확충을 통한 중계무역지대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소삼각지역의 개발보다는 블라디보

28) 예를 들면, 중국은 러시아측과 자루비노항 사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중국의 훈춘과 자루비노를 잇는 도로망을 자국부담으로 개설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청진항 사용권을 확보하는 대신 중국과 북한간의 도로망 확충에 합의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스톡과 나호트카 지역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北·中經濟關係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동 지역 개발계획의 주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⁹⁾

중 국

○ 훈춘지역을 개발중심지로 설정

- 중앙정부의 훈춘지역 종합개발계획 승인하에 추진
- 개발방향 및 단계 : 사회간접시설 확충→경공업부문 유치→기술집약적 산업개발→금융 등 서비스 산업발전

○ 단기계획

-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경공업분야 개발
- 훈춘 부근 5km² 지역을 「국경경제협력구」로 설정하여 보세구역설치

29) 중국과 북한의 개발계획은 1993.11.8~11.10 서울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관련 제2차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것임. 통일원,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추진현황」(서울 : 통일원교류협력국, 1994), pp. 151~152.

- 방천지역 「국경무역소」 설치, 두만강 접경도시 방천 및 훈춘 개방, 경신지역 국제관광단지 조성
- 훈춘-장영자, 훈춘-도문, 훈춘-방천 등 철도 및 도로 건설, 훈춘발전소(20만kw→60만kw) 확충, 통신설비(3만회선) 확충

○ 장기계획

- 첨단 공업단지 조성 및 사회간접시설의 추가확충을 통한 산업고도화 모색
- 훈춘 북방지역에 3개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국경경제협력구」를 16.7km²로 확대
- 훈춘-크라스키노, 훈춘-나진, 훈춘-분수령간 고속도로 건설, 훈춘시 동북 60km지점에 국제공항 건설

북한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발중심지로 설정하고,³⁰⁾ 2010년까지 1,2,3단계의 단기 및 중장기 개발계획

30) 동 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는 나진-선봉지역 개발면적을 기존의 621km²에서 중국 훈춘과 연결되는 원정리일대 125km²를 추가하여 총 746km²로 확대했음을 언급했음. 위의 책, p. 152.

을 추진

○ 단기계획 (~1995)

- 항만확충 : 청진항(하역능력 800만 톤→1,000만 톤), 나진항(300만 톤→1,000만 톤)
- 철도확충 : 회령-학송(168km)구간 전철화, 훈융철교 건설
- 도로확충 : 청진-회령(82km) 확장, 나진-셋별(73km) 신설
- 전력·통신시설 확충 : 선봉지역(발전시설용량 20만kw→40만kw), 국제통신망(12만회선) 확장
- 공단조성 : 신흥, 동명, 창평, 청계, 백학 등 5개 단지 조성

○ 2·3단계 (1996~2010)

- 항만확충 : 나진항(1,000만 톤→3,000만 톤, 컨테이너 하역 전문항), 청진항(1,000만 톤→2,000만 톤)
- 공항신설 : 여객 및 화물수송 중계기지로서의 선봉 국제공항 건설
- 철도·도로 확충 : 고무산-훈융(169km)간 철도 복선화, 청진-나진(61km) 구간의 고속도로화
- 공단조성 : 관곡(550ha) 화학공업단지 등 4개 공단 추

가 조성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과 이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국 영토 내의 도문, 훈춘 등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을 仲介貿易基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아직 다자간의 종합적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보다는 자국의 지역경제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과 수송·통신망 등 사회간접시설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자간의 협력기구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동해안 항만확보 및 도로망 연결이 자국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관건이며, 북한 역시 중국 동북지역의 시장 확보와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수송·통신망의 연결과 항만 및 공항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각자의 계획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국 영토 내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투자 및 공단조성계획을 보면, 중국은 일본 및 러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경공업 위주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

는 반면,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일본시장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공업부터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全産業을 망라한 야심적인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북한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UNDP와 같은 국제기구 주도하의 다자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종합적 청사진에 의한 산업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연계 등 서로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과 투자유치계획과 같이 경쟁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UNDP 주관하의 다자간 경제개발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당분간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雙務的 經濟協力 方式에 의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시장규모와 러시아 동부지역의 자원 공급능력 및 일본의 근접성 등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이 성공적일 경우, 이 지역과 중국간의 무역관계는 전통적인 경제지원 혹은 바터형식의 교역이 아닌 본격적인 경제요인에 의한 국제무역 형태를 띠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第 V 章 北·中 經濟關係 展望

1. 北韓의 對中國經濟政策

본 연구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70년대 이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외경제부문의 활용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은 도외시해왔기 때문에 대외경제부문 활성화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결국 1990년대의 경제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의 지정과 법률정비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치 및 이념적 제약 속에 그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당분간은 대외경제와 대내경제의 유기적 연결을 포함하는 중국식의 적극적 경제개혁이나 개방정책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경제의 비효율성과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對外經濟關係, 특히 무역관계는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과 무역상대국간의 무역수지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방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50~60년 기간 동안 북한의 수입초과증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1961~70년 기간에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소련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1970

년대에는 일본과 서방공업국가로부터 생산설비 도입에 주력한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해 상당한 무역적자가 누증된 것이 특징이며, 1978~84년 기간 동안에는 특히 일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5년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련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1991~92년 기간에는 소련의 역할이 급감한 대신 중국의 비중이 중요해졌음을 나타낸다.

〈표-16〉北韓의 交易對象國別 貿易收支 推移

(單位: US 百萬달러)

연 도	합 계	소련(CIS)	중 국	일 본	OECD
1946~1949	-	-47.0	-	-	-
1950~1953	-146.1	-48.4	-89.9	-	-
1954~1960	-520.1	-47.6	-323.0	-2.4	-
1961~1970	-639.1	-325.2	-304.0	52.4	(-66.7)
1971~1977	-2825.1	-892.3	-769.1	-550.5	-772.6
1978~1984	-1351.4	-70.5	-464.5	-1319.4	24.7
1985~1987	-2401.8	-1637.5	-131.7	-169.1	-229.9
1991~1992	-1338.0	-185.0	-824.7	94.1	-

자료: 1946~88년: Soo-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1991~92년: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및 서방공업국과 중국 및 소련(1990년 이전 시기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서방공업국과의 무역적자 누증은 곧바로 북한의 외채

부담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극적인 생산설비 수입은 1970~1980년대 초반에 제한되었다. 현재 북한경제상황으로 보아 당분간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패턴을 통해 보았듯이,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초과는 주로 원유 및 생산원자재 등의 원조성 물품반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중국 및 소련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무역수지의 크기는 中·蘇 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상대적 의존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북한과 소련의 무역관계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나,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관계는 과거의 무역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核問題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식량 등 주요 품목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일반적 대외무역 형태와는 달리 북한과의 교역은 아직도 대부분이 청산계정이나 바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존한다고 하겠다. 단지 과거에 중국의 중앙정부차원의 무역절차가 길림성이나 요녕성과 같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省정부관할로 전환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청산계정상 누적되는 대북한 무역흑자(북한에 대한 지원성 교역)를 용인하기 어

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북한 수출품에 대해 국제시장가격 혹은 보다 높은 가격수준을 적용하여 북한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나 北·中政治關係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경제지원 품목은 별도의 원조협정이나 중앙정부의 배려에 의해 공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근래에 수출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단위 대외무역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고취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의 수출촉진정책은 비교우위에 따른 産業特化를 지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출자원 동원을 통한 외화획득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자유치 역시 법률제정을 통한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위탁가공교역은 아직 필요한 거의 모든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가득율이 매우 낮으며, 그 대상이 봉제 등 초보적 경공업부문에 국한됨으로써 북한이 바라고 있는 수출상품 수준의 제조기술 습득효과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북한은 비록 최근 나진-선봉지역 중심의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대외경제와 대내경제의 연계에 의한 비교우위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제체제상의 문제점과 기술 및 공급능력상의 결함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수출물자

의 생산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과 중국 간에는 경제논리에 의한 무역이나 투자관계 발전이 어려운 형편이며,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과열로 인한 물자난이나,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를 위한 상호간의 바터형식 교역 위주의 경제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물자교환 방식의 거래를 통한 생필품난 해소를 꾀하는 동시에, 유류 및 곡물 등 전략물자는 중국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담판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지원 받으려는 데 중국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中國의 對北韓經濟政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무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간의 쌍무적 협정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폭 역시 매우 커서 안정적인 무역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품목 역시 소수의 초보적 상품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와 곡물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매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원유 및 곡물의 대북한 수출에 우호가격을 적용하고 청산계정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지원적 성격을 부여해 왔으나,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단

위가 자체 손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우호가격 적용이나 청산계정에 의한 지불연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對北韓 交易에 대해 점차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대금지불 지연의 위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와 곡물 등 전략상품의 대북한 수출시에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대금상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대중국 수입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 의해 경제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협정 등을 통해 無償支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중변경무역은 주로 바터형식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체로 쌍방간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적 낙후된 형식의 北·中交易形態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로서는 길림성과 요녕성 등 중국 동북부지방은 중국에서도 경제개혁의 속도가 느린 1차산업 및 중공업위주의 지역이라는 점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대외개방의 정도 역시 다른 지방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중국이 현재와 같

은 바터형식의 변경무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즉 북한은 가공도가 높은 수출상품 공급능력의 제약성으로 인해 점차 대중국 수출품목을 1차상품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나, 북한경제 자체수요 희생에 의한 1차상품의 공급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의 수요가 점차 부족한 물자의 공급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품목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 경우 북한상품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분간은 북한의 시장지향적 체제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중국기업의 직접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다자간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역시 북한과 중국간의 경쟁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상호협조에 의한 종합적 개발계획의 추진은 힘든 형편이다.

3. 北·中 經濟關係 展望

북한이 본질적인 경제체제의 개혁 없이 우선 필요한 생필품의 조달원으로서 북·중무역을 활용할 경우 국제환경변화나 북한 자체의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북·중교역은 단시간 내에 격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바터제 무역의 결함으로

인해 지속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차원의 원유 및 곡물 수출도 일단 국제가격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무한정으로 의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에서도 경제개혁의 진행에 따라 경제논리가 지배적 논리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중국의 원조성 수출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한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利權을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탈피를 위한 노력과 중국 동북3성 개발붐의 여파에 의해 북·중경제관계의 중요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중경제관계의 한계성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중교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에는 심각한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경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수출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바터제 교역이 가지고 있는 결제방법 및 가격결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북·중간의 교역증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강철, 시멘트, 목재 등은 북한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경우 북한 자체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품목이다.

셋째,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품인 원유, 곡물 및 식품류, 일부 기계부품 등은 중국과 북한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

상품구조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국내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임시적 상품구성일 뿐이다.

넷째,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의한 무역발전요인은 갖추고 있으나, 두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통신 및 국제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결여하고 있다.³¹⁾

31) 즉 중국 동북지방의 개방·개혁이 촉진되고 북한이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경우, 두 지역은 다같이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권과의 교역을 선호할 것이다.

第Ⅵ章 結論

1991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대외경제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1960년대 이래 가장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식량의 주공급원이 되었으며, 북한은 北·中변경무역을 통해 주민의 생활필수품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경제체제의 개방에 따른 새로운 관계의 발전이 아니었으며, 중국 동북3성과 북한간의 바터형식 교역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단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까지 舊蘇聯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패턴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이후 북·중무역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이를 경제논리에 의한 국제무역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1992, 1993년도의 북·중무역 확대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물물교환 방식을 통한 변경무역의 증대와 중국정부의 지원성 수출이 지속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개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더 이상 우호가격이나 청산계정을 통한 지원성 대

북한 수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곧 국제시장가격의 적용을 통한 대북한 대금상환 압력의 증가로 나타났다. 비록 중국정부가 북한체제의 생존이나 특별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원유나 곡물의 대북한 경제원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북·중경제관계의 지속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가 시장지향적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는 단기간에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역시 상호 경쟁적인 외자유치 전략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 연계를 위한 사안별 협조 이외에 적극적인 계획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국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북·중경제관계는 1994년도와 같이 큰 폭의 기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북·중경제관계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와 같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북·중경제관계에 의존하여 현재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점차적으로 시장지향적 개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제노동분업체제로의 편입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불균형과 경쟁력 낙후로 인한 수출능력의 제약요인 등

은 북한경제를 끊임없는 무역적자와 외채부담의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대외무역교육출판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관계대
사기 : 1949-1985」. 북경 : 대외무역교육출판사, 1987.

대한무역진흥공사. 「'92, '9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
대한무역진흥공사, 각년도.

—————.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서울 : 대한무역
진흥공사, 각년도.

일본무역진흥회 해외경제정보센터.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1992.9.

중국경제연감편집위원회. 「중국경제연감」. 각년판.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 북경 : 중화인민공
화국해관총서, 각호.

—————.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 북경 : 중
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

—————. 「중국해관통계적요」. 북경 : 중화인
민공화국해관총서, 각년판.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1993」.

통일원.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추진현황」. 서울 : 통일원교류
협력국, 1994.

-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집」. 서울 : 통일원, 1994.
- .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 서울 : 통일원, 1994.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경무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1993.8.
- 한국은행. 「1993년도 북한GNP 추정결과」. 서울 : 한국은행 조
사2부, 1994.6.
- 經濟管理出版社. 「中國口岸概覽」. 北京 : 經濟管理出版社, 1992.
- 아시아經濟研究所. 「아시아經濟」. 1993.7.
- 韓洪錫. 「中國における邊境貿易の現状と役割」.
- Jeffries, I.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s to The Market :
A Guide*. London : Routledge Publishing Company, 1993.
- Koo, Bon-Hak.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1961-1990*.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2. 論文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KDI
정책포럼」, 제31호 (1994.1).
- Brezinski, Hor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KDPR
and CMEA and Its Members.” in *The Economy of the
Kore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1945-1977:
Economic Policy and Foreign Trade Relations with*

Europe. Edited by Youn-soo Kim. Kiel : German Korea-Studies Group, 1979.

Choi, Soo-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Oh, Seung-Yul.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i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Seoul :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93.

3. 其他

「내외통신」.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통상정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홍콩. 「大公報」.

日朝貿易會. 「日朝貿易」.

「外貿調研」.

〈부록-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실적 : 1992~1994

(단위 : US\$ 1,000)

HS 코드	품 명	1992		1993		1994, 1~11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I	산동물/동물성 생산품	13,314	6,711	11,585	5,951	12,426	2,408
01	산동물	509	2	74	36	16	20
02	식용육류	10	5,654	-	4,850	-	1,936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12,727	755	11,505	629	12,389	108
04	낙농품/천연꿀 등	-	119	-	382	2	319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68	182	6	54	15	25
II	식물성 생산품	6,547	98,674	1,660	123,582	1,562	40,802
06	수목/기타 식물	4	-	50	-	1	-
07	식용채소/뿌리	6	624	2	1,115	5	410
08	식용과실/견과	2,549	1,908	617	5,264	282	5,977
09	커피/차/향신료	-	182	-	35	1	19
10	곡물	772	68,477	33	97,676	221	23,737
	(사료용 옥수수)	-	-	-	(94,029)	-	-
11	제분공업 생산품	-	12,852	-	5,893	-	1,706
12	종자/과실/공업용 식품	3,216	14,530	958	13,569	1,041	8,808
13	야고/수지/식물성 액	-	-	-	10	12	79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	101	-	20	-	65
III	동식물성유지/분해생산물	178	2,766	-	8,053	19	2,324
15	동식물성유지/분해생산물	178	2,766	-	8,053	19	2,324
IV	조제식품/알콜/식초/담배	138	28,562	66	24,581	141	15,361
16	육류/어류/갑각류 조제품	-	2,854	-	4,905	-	523
17	당류와 설탕과자	-	17,154	11	10,757	1	6,739
18	코코아 및 조제품	-	228	-	168	-	270
19	곡물/전분/우유 조제품	-	825	-	1,032	-	988
20	채소/과실/견과류 조제품	23	95	-	76	1	106
21	기타 조제식품	-	146	-	405	-	326
22	음료/알콜/식초	89	2,939	55	3,138	139	2,346
23	식품공업 잔유물	26	2,037	-	2,431	-	3,297
24	담배	-	2,283	-	1,669	-	767

HS 코드	품 명	1992		1993		1994, 1~11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V	광물성 생신품	40,900	227,323	40,275	256,349	23,234	181,276
25	소금/황/석회/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5,294	3,519	19,459 (17,369)	5,473	15,143	4,714
26	철광/슬래/회 (철광)	17,076	1,588	12,520 (11,930)	13,014	6,619 1,471	6,825
27	광물성연료/광물유 (유연탄) (석유)	18,530	222,323 (84,556) (137,767)	8,295	237,861 (69,868) (139,874)		169,738
VI	화학공업/연관공업생신품	5,468	25,328	4,712	40,282	2,577	32,169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금속류	68	4,615	82	5,046	356	3,714
29	유기화학제품	2,653	3,882	1,542	5,396	587	2,798
30	의약품	-	659	7	805	5	223
31	비료	2661	1,424	2,797	336	1,129	3,684
32	염료/안료/페인트	23	1,807	165	2,152	6	3,753
33	조제향료/화장품류	-	168	-	175	5	220
34	비누/세제	-	4,426	-	15,248	4	6,283
35	단백류/아교축매류	2	22	-	362	-	69
36	화약/화약제품	29	457	-	62	6	5
37	사진/영화용 재료	25	207	2	211	23	200
38	기타 화학공업 생신품	7	7,660	117	10,490	456	11,200
VII	플라스틱/고무제품	4,083	14,140	3,381	26,755	641	22,626
39	플라스틱 및 제품	3,151	3,809	3,339	10,242	638	14,158
40	고무 및 제품	932	10,331	42	16,513	3	8,467
VIII	원피/가죽/모피 및 제품	13	296	623	669	7,764	1,128
41	원피와 가죽	-	2	534	14	575	85
42	가죽제품/여행용구/핸드백	-	250	44	545	-	322
43	모피/인조모피 및 제품	13	45	45	110	7,188	721
IX	목재 및 제품	4,831	330	7,364	1,734	5,674	1,826
44	목재 및 제품/목탄	4,815	161	7,344	1,304	5,672	1,268
46	짚/에스파르트/조물재료제품	16	169	20	430	2	558

HS 코드	품 명	1992		1993		1994, 1~11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X	펄프/종이	668	6,444	1,256	10,781	424	6,840
47	목재펄프	-	365	80	1,635	-	1,092
48	종이/편지	589	6,053	1,173	9,123	422	5,746
49	서적/신문/인쇄물	79	36	3	23	2	2
XI	방직용 섬유 및 제품	1,193	58,157	4,289	33,123	3,184	33,093
50	견	-	-	477	8	1,183	16
51	양모 및 직물	268	1,184	-	462	143	1,769
52	면	-	14,398	37	10,530	173	3,698
53	식물성 방직섬유 및 직물	-	435	6	239	-	393
54	인조 펄라멘트	147	8,234	971	3,431	152	4,790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176	12,095	372	5,235	312	9,197
56	위딩/펠트/부직포/로우프	-	777	15	1,848	12	2,094
57	양탄자류/바닥갈개	-	63	-	162	-	217
58	특수직물	10	676	10	270	14	330
59	공업용 섬유제품	-	1,140	151	1,204	71	1,972
60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8	765	36	819	27	992
61	의류 및 부속품(메리야스용)	15	5,535	106	3,936	1,047	1,383
62	의류 및 부속품(기타용)	569	8,025	2,093	2,093	52	2,217
63	방직용 섬유의 기타제품	-	4,828	14	2,889	-	4,025
XII	신발류/모자류	58	4,027	28	1,852	41	1,955
64	신발류	58	3,995	28	1,588	40	1,907
65	모자류	-	27	-	181	-	1
66	우산/지팡이	-	-	-	60	-	46
67	조제우모/솜털제품	-	6	-	24	1	1
XIII	돌/플라스틱제품/도자기/유리	250	1,370	215	2,578	795	1,814
68	돌/플라스틱/시멘트제품	191	44	208	908	792	341
69	도자기	4	175	7	442	2	97
70	유리/유리제품	55	1,152	-	1,228	1	1,375
XV	비금속 및 제품	74,206	17,183	212,313	23,466	125,071	10,947
72	철강	66,878	8,320	207,706	10,488	121,071	3,307
73	철강제품	307	3,767	896	7,837	293	5,360
74	구리 및 제품	2,327	241	1,593	603	1,678	316
75	니켈 및 제품	68	-	-	-	-	10

HS 코드	품 명	1992		1993		1994, 1~11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76	알루미늄 및 제품	849	2,499	1,700	2,359	959	923
78	납 및 제품	-	-	119	241	601	-
79	아연 및 제품	3,485	528	234	940	388	242
80	주석 및 제품	-	-	-	301	-	130
81	기타 비금속제품	288	1,080	41	54	56	128
82	비금속제 도구/공구	4	292	21	82	2	105
83	비금속제 각종제품	-	507	3	561	23	427
XVI	기계류/전기전자기기	2,754	27,103	2,631	28,875	160	21,276
84	원자로 보일러/기계류	581	12,715	564	10,458	144	9,234
85	전기전자기기/부분품	2,173	14,388	2,067	18,417	17	12,042
XVII	차량/항공기/선박/수송기기	785	10,722	6,871	11,207	80	5,687
86	기관차/차량	-	3,543	-	1,332	30	97
87	차량 및 부속품	785	6,386	741	9,076	50	5,341
88	항공기 및 부속품	-	16	-	-	-	2
89	선박/수송구조물	-	778	6,130	798	-	247
XVIII	광학/정밀/의료기기	76	10,093	4	958	28	1,011
90	광학/정밀/의료기기	73	883	4	935	27	841
91	시계 및 부분품	-	9,193	-	19	-	151
92	악기 및 부분품	3	16	-	4	1	19
XIX	무기/총포탄 및 부분품	-	7	-	45	-	1,515
93	무기/총포탄 및 부분품	-	7	-	45	-	1,515
XX	잡제품	-	1,754	13	1,514	6	1,235
94	가구/침대/조명기구	-	567	7	990	-	253
95	완구/운동용품	-	149	2	144	-	324
96	잡제품	-	1,038	4	379	6	659
XXI	예술품/수집품/골동품	1	-	5	-	10	2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1	-	5	-	10	2
총 계		155,463	541,107	297,291	602,354	183,835	385,299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북경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1994) ; _____, 「해관통계」(북경 : 중화인민
공화국해관총서, 1994.11).

〈부록-2〉 북·중 경제협정 내역: 1950~1985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50. 8.18	물자교환협정	북경	-	-
1953.11.23	공동성명	북경	김일성, 주은래	1950.6.25~1953.12.31 동안 지원과 중국측 비용을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로 처리하며,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 1954~1957년 동안 인민폐 8억원을 무상 현물 지원하기로 함.
1953.11.23	경제문화협정	북경	김일성, 주은래	-
1954.1.25	국경철도협정	북경	남학룡, 무경천	양국간에 1954.4.1부터는 화물, 1954.6.1부터는 여객화물 수송을 연결함.
1954.5.20	환율협정	북경	조선중앙 은행 중국인민 은행	변경화폐대환의정서 및 비무역대환 의정서 채택
1954.9.4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김귀남, 서설한	북한 : 전력, 광산품, 해산품, 약재 중국 : 석탄, 어선, 건축재료, 기기, 공업 원료 상호제공
1954.12.31	무상원조의정서	북경	황태성, 공원	1995년 중국은 북한에 대해 현금 및 건축기재, 교통기재, 금속제품, 화물차, 기계, 화공원료, 방직기재, 석탄, 직물, 종이를 무상원조함.
1954.12.31	1955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황태성, 공원	중국 : 강재, 면화 등 교환 의정서 북한 : 전력, 광산품, 해산물, 과일 상호 제공
1956.1.12	1956년도 물자원조의정서,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진반수, 엽계장	중국 : 면화, 면직물, 석탄, 강재, 기기, 통신기재, 화공원료 북한 : 광산품, 해산물, 과일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57.1.4	1957년도 물자원조의정서,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진반수, 엽계장	중국 : 식량, 면화, 면직물, 석탄, 소금, 강재, 화공원료, 종이, 건축재료 북한 : 철광석, 주석, 강철, 유색금속, 시 멘트, 과일, 해산물
1957.12.31	과학기술 합작협정	평양	-	조중과학기술위원회 설치
1958.1.21	1958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박영빈, 강명	중국 : 석탄, 코크스, 면화, 면직물, 목 기, 강재, 대두, 화공원료 북한 : 철광, 유기비료, 화공원료, 해산 물
1958.9.27	1959~1962년간 물자교환의정서		이주연, 박일파	중국 : 석탄, 면화, 면직물, 타이어, 강철, 압연강재, 비철금속 북한 : 철광석, 구리, 납, 인삼, 해산물
1958.9.27	정부차관협정 (중국→북한)		이주연, 박일파	방직공장 및 시멘트포장지 공장 각1개소의 시설재 구매용 1961년부터 10년간 현물상환
1958.11.19	1959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	중국 : 석탄, 강재, 면화, 석회, 유황, 타 이어, 화학시료, 설탕, 기계 북한 : 철광석, 구리, 특수강, 비료, 화 약, 벼종자, 인삼, 해산물
1958.12.27	비무역환율협정 무역청산협정	북경	-	1959.1.1부터 발효
1959.2.18	항공운수협정	북경	민용항공 대표단	-
1959.5.21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평양	조중 과기합작 위원회	제2차회의
1959.8.25	황해어업협정	북경	김성연, 장우범	수자원이용 및 어업발전협조

연 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60.2.29	1960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김현국, 강명	중국 : 석탄, 코크스, 대두, 면화, 타이어, 망간, 유황, 화공원료, 기계류 북한 : 철광석, 구리, 아연, 납, 고속강, 탄 소강, 무연탄, 비료, 과일
1960.5.23	국경하류항운 합작협정	북경	-	-
1960.10.13	차관협정설비 및 기술제공협정 (중국→북한)	북경	이주연, 이선남	1961~1964 동안 4억 2천만 루블 상당 장기차관 : 타이어, 무선통신기기, 생필 품 공장건설 협조, 방직설비 등 현 물차관 제공
1960.10.18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북경	-	중국 : 경공업, 화공, 기계부문의 기술자 파견 및 북한기술자의 중국연수기 회 부여 북한 : 농업, 건축기술자료 및 종자제공, 화공업관련 중국기술자의 북한연 수기회 부여
1961.3.18	1961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이장춘, 이강	중국 : 석탄, 면화, 중석, 타이어, 기계설 비, 화공원료 북한 : 철광석, 유색금속, 화학비료, 선 반, 관계용 기계, 해산물, 과일, 인 삼
1961.7.11	조중우호 및 상호원조협정	북경	-	1961.8.30 유소기 비준
1961.11.24	보충의정서	북경	-	압록강, 두만강 목재운송의정서 유효기간 연장
1962.1.8	1962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 엽계장	중국 : 강재, 석탄, 유황, 기계류 북한 : 철광석, 트랙터, 과일, 토산품
1962.11.5	통상항해조약 1963~1967년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이주연, 이선남	-
1962.11.5	1963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이일경, 엽계장	조중무역회담 공동성명 발표
1963.10.14	1964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이일경, 이강	중국 : 코크스, 광산품, 석유, 합금류, 강 관, 강재 북한 : 선반, 광산품, 시멘트, 토산품, 철 강제품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64.5.9	기술합작협정	북경	기술 대표단	-
1964.6.10	해상운수의정서	평양	-	-
1964.9.12	국경철로연합 위원회의정서	길림	이용분, 유우농	-
1964.9.24	1965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방태을, 엽계장	중국 : 코크스, 광산품, 석유, 강재, 타이어, 고무, 면화, 설탕, 자동차, 화학시료 북한 : 선반, 공구, 자동차, 무연탄, 광산품, 선철, 강재, 화공품, 홍삼, 농토산품
1964.10.17	과학기술합작의정서	북경	원동구, 이소	조중과학기술합작위원회 제7차회의
1965.12.14	1966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유성의, 이강	중국 : 코크스, 광산품, 석유, 화공품, 강재, 합금류, 자동차, 면화, 설탕 북한 : 선반, 트랙터, 공구, 무연탄, 선철, 시멘트, 방직품
1966.12.3	1967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유성의, 이강	중국 : 코크스, 중석, 철합금, 강재, 석유제품, 고무, 타이어, 자동차, 면화, 대두, 설탕, 식염 북한 : 선반, 전동기, 공구, 무연탄, 광산품, 강재, 시멘트, 화공품, 방직품, 사과
1963.3.4	1968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유성의, 가석	-
1969.1.24	1969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유성의, 이강	-
1970.3.2	1970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유성의, 주화민	-
1970.10.17	경제기술원조협정	북경	정준택, 이선념	-
1970.10.17	1971~1976년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정준택, 이선념	-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70.10.17	1971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방태울, 이강	-
1971.8.16	경제합작협정	북경	정준택, 이선념	-
1971.11.17	선박검사합작 의정서	평양	소기호, 이운천	-
1971.12.30	1972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방태울, 이강	-
1972.12.13	1973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방태울, 이강	-
1972.12.23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북경	과학기술 합작 위원회	제13차회의
1973.6.18	경제기술합작 협정 및 의정서	북경	최재우, 이선념	-
1973.12.31	국경하류항운 의정서	북경	국경하류 항운 합작 위원회	제13차회의
1974.1.9	1974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	-
1975.12.2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평양	과기 합작 위원회	제16차회의
1976.1.6	조중우의 송유관개통	-	-	경축사절단 상호방문
1976.2.6	1976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	-
1976.12.17	1977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	김석진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무역 대표단 방중
1977.2.5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북경	김유근, 손효봉	과기합작위원회 제17차회의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고
1977.3.9	장기무역협정, 1977년도 물자 교환협정	북경	-	계응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무역대표단 방중
1978.1.26	국경하류항로 합작의정서	심양	국경하류 항도 합작 위원회	제17차회의
1978.5.2	1978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김석진, 정척빈	중국무역대표단 방북
1978.6.6	과학기술합작 의정서	평양	과학기술 합작 위원회	제18차회의
1978.7.16	국경철도의정서	강계	철도 대표단	-
1978.12.23	1979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이성록, 진결	-
1979.2.6	국경하류항운 합작의정서	신의주	하류항운 합작 위원회	-
1979.8.28	국경철도의정서	심양	-	1979년도연례회의
1980.3.14	1980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한수길, 진결	-
1980.12.1	1981~1982 과학합작계획	북경	조중과학 원	-
1981.1.14	국경하류항운 합작의정서	신의주	국경하류 항운 합작 의정서	제20차회의
1981.2.10	1981년도 물자교환의정서	북경	-	최정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무역대표단 방중

연도	협정명칭	장소	서명자	비 고
1982.2.14	국경하류항운 합작의정서	심양	국경하류 항운합작 위원회	제21차회의
1982.3.4	1982년도 물자교환의정서	평양	최정근, 정척빈	-
1982.10.28	1982~1986년간 장기무역협정	평양		진모화를 단장으로하는 중국무역대표단 방북
1982.10.28	과학기술 합작의정서	평양	과학기술 합작 위원회 22차회의	기계, 화공, 농업, 임업, 수리, 전재, 의료 방면합작 등의
1982.11.28	무역결제협정 비무역결제협정 환율협정	북경	조선무역 은행 중국은행	-
1983.5.5	평양주재 중국토 목기술자 서훈	평양	박성철	
1983.7.4	과학기술 합작의정서	북경	김응호, 동지용	과학기술합작위원회 제23차회의
1983.7.27	청진항사용계약	평양	손기평, 오병택	길림, 흑룡강성의 대일본 수출입시 청진항 사용을 가능하게 함
1984.3.8	압록, 두만강 항운의정서	심양	강성목, 장문례	압록, 두만강항운합작위원회 제23차회의
1984.4.27	1984년도 물자교환협정	평양	이성록, 여학검	-
1984.6.15	과학기술 합작의정서	평양	김응호, 동지용	기계, 화공, 농업의 기술합작 등의(제24차회의)
1985.1.12	1985년도 물자교환협정	북경	조성범, 진결	-
1985.1.17	경계원조협정 (중국→북한)	북경	공진태, 전기운	-
1985.5.22	압록, 두만강 항운 의정서	신의주	강성목, 장문례	압록, 두만강항운합작위원회 제24차회의

자료 : 대외무역교육출판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관계사기 : 1949-1985」(북
경 : 대외무역교육출판사, 1987), pp. 23~32.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應 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정상회담과 기본
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
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 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정책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의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
 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
 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1995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研究報告書 94-1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